

“도시계획 예정도로 폐지로 맹지 전략...사용료 수백만원 널 판”

광주 동구, 학동 조선대병원 인근 591-13 등 6필지 일몰제 폐지 인근 가게 “사유지로 풀려 소유주에 월 3백만원 사용료 내게 생겨” 동구 “소유권 침해에 장기 미계획 폐지...심의 후 도로 지정 검토”

광주시 동구가 조선대병원 인근의 도시계획 예정도로를 폐지하면서 일부 토지가 하루 아침에 맹지(盲地)로 전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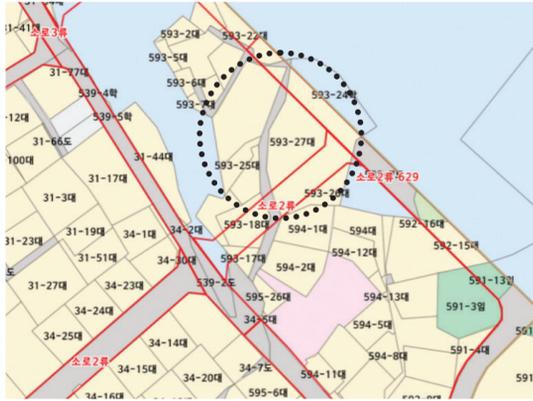
도시계획 예정도로 폐지 부지 인근에서 영업 중인 업주 A씨는 9일 “동구의 인접한 행선도로 가게에 인접한 도로가 끊겨 인근 사유지로 지주에게 한 달 300만원씩 도로 사용료를 낼 상황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광주시 동구는 지난 2020년 7월 학동 591-13 등 6필지를 지적도상 도시계획 예정도로에서 해제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예정도로를 일몰제로 폐지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도시계획상 도로개설이 예정된 부지를 가리킨다.

해당 부지는 조선대병원 전문진료센터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접근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현재 4개 약국이 영업 중인데, 약국 앞을 지나는 폭 6여m 부지에 도로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구청 예산이 부족하고 가설건축물이 들어



광주시 동구 학동 591-13 일대의 지적도. 현재는 도시계획 도로계획선 일부(점선)가 폐지됐다.

서 실제 통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등 이유로 도시계획이 집행되지 않았다.

문제는 도시계획 해제 조치로 인해 학동 593-11 등 토지는 인접 도로가 없는 맹지가 된 것이다. A씨의 가게도 이에 해당한다.

해당 부지의 건축주는 지난 2007년 도시계획 예정도로를 인접해 건축 허가를 받고 3층짜리 건물을 세웠으며, 당시에는 건축법상 건축 허가 조건인 너비 4m 이상, 국가·지자체 소유의 도로 등을 인접해



광주시 동구 학동 조선대병원 인근의 가게 부지. 당초 이곳에는 도로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도시계획이 무산돼 가장 안쪽의 가게(오른쪽)는 인접 도로가 없는 맹지가 됐다.

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였다. 건물 인근에는 골목길이 하나 더 있지만, 폭이 3여m에 불과한 좁은 길이라 차량이 지나기 어렵다.

업주 A씨가 문제를 인식한 것은 지난해 6월 23일로, 인근 가게로부터 “다른 사람의 사유지를 고객들의 통로로 이용한 데 따른 사용료로 보증금 1000만원, 월 300만원을 내라”는 내용증명을 받으면서다.

A씨는 “건축허가까지 받아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동구의 이상한 행적으로 맹지가 됐다”며 “일몰제로 인해 도로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건축주, 업주 등과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동구 건축과는 민원이 제기되자 가게 앞 도로를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

는 안을 검토 중이다. 도로로 지정되면 도로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토지 소유주는 사유지를 도로로 지정할 때 따른 사용료를 동구를 통해 받을 수 있으므로 분쟁을 일단락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도로 지정을 거처더라도 이 곳 부지는 당분간 외부 도로와 연결이 단절될 전망이다.

외부 도로와 연결되는 지점인 학동 593-7 부지에 지목이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가설건축물 한 채가 설치돼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근 학동 593-3 또한 당초 도시계획상 도로 예정부지였음에도 가설건축물이 들어서 있다.

이들 가설건축물은 각각 2011년, 2015년에 ‘도로 개설 시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도시계획 예정도로 부지에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

인됐다. 하지만 도시계획이 백지화되자 두 가설건축물의 자진철거 관련 공증 내용 또한 무효화됐고, 철거를 서두를 이유가 없어졌다.

결국 동구는 4년째 불법건축물로 전환된 두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철거 명령만 내리고 있을뿐 별다른 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이 땅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 따라 도시계획을 폐지하게 된 것으로, 전국적으로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우선 업주들 간 분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한 뒤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 유치원→노치원 변신 ‘전국 4번째’

광주·전남 10년간 36곳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

저출생·고령화가 가속화되며 광주·전남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36곳이 노인 장기요양기관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광주 북구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전환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2014~2024년 8월)간 광주·전남에서 총 36곳의 어린이집·유치원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됐다.

전국에서 어린이집·유치원이 장기요양병원으로 전환된 사례는 10년간 총 284건이다. 광주가 24곳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고, 전남은 12곳이 전환됐다. 경기도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47건), 충남(28건) 순이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전남에서 장기

요양기관으로 전환된 어린이집·유치원은 1곳이었으나, 최근 5년(2020~2024년 8월)간 32곳으로 크게 늘어났다.

10년간 광주시 광산구에서 13곳으로 가장 많은 전환이 이뤄졌고, 북구(6곳), 서구(3곳), 동구(1곳), 남구(1곳) 순이었다. 전남에서는 여수시에서 9곳이 전환됐고, 영암군(2곳), 진도군(1곳) 등이다.

전 의원은 “최근 저출생·고령화로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의 경영난, 노인장기요양기관 수요 폭증이 발생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영·유아 시설 폐업과 장기요양기관 수요 조사를 통해 정부가 공공서비스 확충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서울대 합격도 ‘지방 소외’...광주·전남 ‘매우 저조’

지난해 129명 등 매년 감소세

최근 5년간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광주·전남 지역 학생 비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을호(비례대표)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가운데 전남지역 학생 수는 45명(1.23%)으로 제주 41명(1.12%), 울산 42명(1.14%)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다.

전남은 2020학년도 60명(1.80%), 2021학년도 57명(1.70%), 2022학년도 50명(1.45%), 2023학년도 41명(1.19%) 등 1%대를 맴돌았다.

매년 서울대 합격자 수가 감소한 광주도 2020학년도에 113명(3.38%), 2021학년도 84명

(2.50%) 2024학년도 84명으로 100명 선마저 이미 무너졌다.

반면, 서울은 2020년 1199명으로 35.89%를 차지했고 2024학년도에는 1344명(36.62%)으로 늘었다.

경기는 2020년 756명에서 2024학년도 919명으로, 인천은 148명에서 162명으로, 세종은 32명에서 72명으로 급증했다.

정을호 의원은 “대학입시가 소득수준과 거주지에 따른 교육 기회 불평등으로 심화하고 있다”며 “서울 4년제 주요 대학에 대해 고등학교 재학생 비율에 따라 학생 선발을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장관과 서울대 등에 강력하게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 벼멸구 피해 조사 21일까지

전남도가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21일까지 피해 조사에 들어간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사군 피해조사회의를 열고 세부 조사 일정 등을 논의했다.

현재 전남지역 벼멸구 피해는 전년(675ha)보다 많은 1만 960ha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된 상태로, 벼멸구 피해 농가는 해당 재배자가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피해 벼를 수확하지 않은 농가는 반드시 수확 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고 피해 농지를 사진 촬영하는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한 뒤 수확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이미 피해 벼를 수확한 농가는 신고서와 함께 지역농협에서 발급하는 ‘농작물재해보험 피해조사 내역서’ 등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전남지역 벼 재배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79% 수준이다.

피해 농가의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농약대(ha당 100만 원), 80%이상인 경우 대파대(200만 원)를, 피해율에 따라 생계비(4인 기준 183만원)와 학자금 등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본격적인 벼 수확기인 만큼 수확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해 11월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dok2000@kwangju.co.kr

국민대통합을 위한
영호남 문화대축제
10.11.☎ - 10.13.☎
쌍암공원 중앙광장 일원

영호남 화개장터, 상생장터 홍보관, 영호남 문화교류

주최·주관: 광주일보사, 매일신문사, 특별후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